

강기정 광주시장 “‘4년간 20조 지원’ 특별법에 명시를를”

행안위 입법공청회서 국회협력·중앙부처 결단 촉구
광역의원 정수 조정도…국무총리에 ‘특례 절실’ 설득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확실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례의 절실함과 시도민 뜻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특례를 부동의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재정 분야와 의원 정수, 기업 유치에 위한 특례 조항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추진한 지 35일째 된다. 매우 빠르게 추진돼서 부족할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통합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특례 중 119개가 부동의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법안도 충분하지 않았고, 매우 빠르게 진행돼 최

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의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재정 지원과 통합시의회 정수, 기업 특례 조항 등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매년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발의된 법안에 담겨있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원 정수가 3배 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에 의원 정수를 늘려주든지, 원 구성 과반을 특정 지역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든지 등의 내용을 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인공지능 등을 시범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며 “이후에 개별법으로 담자고 했는데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 내부 5개 구로 권한 이양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논의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행안부의 반대가 심하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남 광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의 생존문제인 광주전남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의

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우려를 낳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의회 “재정·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껌데기”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특례 불수용 지적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각종 특례를 정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특례는 껌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

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통합을 거쳐 발의된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에 대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전남·광주 통합을 명목만 남은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드는 데 있다”며 “AI·에너지 등 지역 미래 산업을 좌우할 권한이 중앙에 묶인 채로는

통합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 통과 후 보완이라는 안일한 접근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책임 있는 자제가 아니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를 기약하자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불확실성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전남·광주 통합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 이양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통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떠한 후퇴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이병훈, 행정통합 ‘5대 권역별 전략’ 제시

광주 첨단·문화산업 등 융합

전남 동부, 산업·생활 거점

서부·남부, 신재생에너지 육성

구상이다.

나주, 장성, 함평, 담양, 화순 등 광주 연계권은 광주의 AI·자동차 산업과 나주 혁신도시의 에너지 공공기관, 인근 지역의 농생명·식품·바이오·관광 자원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해 일자리와 주거,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경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곡성·구례)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고도화, 생태·정주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생활 거점으로 육성한다. 고흥은 국가 우주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 보성·곡성·구례는 스마트팜과 문화·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 서남권(목포·무안·영암·영광)은 수산물 가공·유통과 해양관광 산업 중심지 육성과 함께 해양에너지 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전남 남부권(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은 해양·문화관광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연계산업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남에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미래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행정통합에 따른 5대 권역별 전략을 내놴다.

이 예비후보는 9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불균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주·전남을 5대 권역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구상한 5대 권역은 광주권, 광주연계권, 전남 동부권, 전남 서부권, 전남 남부권으로, 각 권역의 특성과 역할을 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광주 도시권에 대해서는 역사성과 정체성 광역 대도시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고 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적해 광주를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이 융합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여성수입’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與 경선 구도 ‘급변’…또 무소속 출마하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외국인 여성수입’ 발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제명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진도군수 선거 판도가 급격히 흔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김 군

수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제 사유는 2026년 2월 4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을 법제화해 해결하지 못하면 스리랑가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충격을 장기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과 관련해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은 전남도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전남도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군수의 제명으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4수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초 민주당에 입당해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그러

나 이번 제명 조치로 민주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해졌으며, 무소속 출마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진도군수 경선은 김 군수를 제외하고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재가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6~8대 진도군의원 및 군의회 의장을 지낸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마 체비에 나서며 각종 지역 행사장을 누비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 구도는 이재가·김인정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김용집 전 시의회 의장, 남구 발전 비전 제시
출판공유회 성료…AI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구상도 내놴

6·3 지방선거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최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저서 ‘김용집의 소망’ 출판공유회를 갖고 하고 남구 발전 비전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정진욱·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남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저서 ‘김용집의 소망’은 남구의 현안을 ‘집’에 비유하며 주거, 복지, 일자리, 소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정 혁신 비전을 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 복지, 노년과 청년이 공존하는 공동체, 지역 경제의 생활밀착형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장은 “행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따뜻한 터전이어야 한다”며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바라보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판공유회에서 그는 올해를 ‘광주·전남 통합 원년’으로 규정하며, 남구 대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AI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통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견제하는 이웃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적 연대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정치는 시민과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

차승세 당대표 정무특보 출판기념회 성료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차승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사진)는 최근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저서 ‘다시 노무현, 바보 차승세’의 출판기념회를 갖고, 선거 출마를 향한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출판기념회에는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 신정훈·박근혜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삼호 광주노무현재단 상임대표와 ‘100만 역사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등도 참석. 차 특보의 정치 철학과 광산의 미래 비전을 확인했다.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전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를 전하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차승세 당대표 정무특보는 “저서 ‘다시 노무현, 바보 차승세’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처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고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는 믿음을 담은 책”이라며 “정치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산구청장 선거 시의원 단일후보에 박수기

여론조사 통해 단일화 합의…원팀체제 구축

광주 광산을 지역구 시의원들이 박수기 의원(사진)을 6·3지방선거 광산구청장 단일 후보로 단일화하고, 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구성을 선언했다.

박수기·박필순·이귀순광주시의원은 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박수기 의원을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일화는 지난 5~6일 진행된 ‘광산구청장 후보 박수기/이귀순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양 후보는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수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구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박수기 의원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하기로 하고, 광산구청장 선거의 ‘원팀’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이귀순·박필순 의원은 “통합특별시에에 제도전하며, 새롭게 탄생할 통합 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동

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박수기 의원은 “구민의 선택을 소중히 받들어 광산의 혁신적 변화를 바라는 열망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광산구를 통합특별시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